

# 삼성전자 광주 노동자 85% '산재 신청 눈치'

### “하위 고과 각오해야” “산재 인정 분위기 전혀 없다”

### 산재 요건 갖추어도 ‘공상·개인치료 대체’ 38.7%

지난해 산업재해를 노동당국 신고 없이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 꼴로 산재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공상 또는 개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가 노조 의뢰로 위탁 진행했으며, 조합원 등 노동자(전체 사업장 노동자 2600여 명 중 21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조합 간부 집단 심층 면담 등을 조사에 활용했다.

노조가 공개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212명 중 180명(84.9%)이 ‘산재 신청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상사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8.7%(82명)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공상(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산재 요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면담 조사선 “산재 신청하거나 병가 신청을 하면 하위 (인사)고과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산재 인정을 받아들이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본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조합원이 산재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 등의 진술이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또 산재 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교육도 요식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사로부터 업무 중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방법, 절차 및 보상 내용 등에 대해 교육 받았다’고 묻자 응답 노동자의 72.2%에 해당하는 153명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 당 6시간)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노동자는 81.6%였다. 새로운 작업에 배치될 때 유해·위험 요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59.4%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사진만 촬영하고 작업과 무관한 교육이 많아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작업 안전 지점이 나오기 전에



새 설비를 가동부터 한다”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

직업성 재해로 추정되는 근골격계, 청각계 관련 질환을 겪은 노동자도 과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응답 노동자의 59.4%가 근골격계 질병, 92.5%는 난청 또는 이명 등으로 나흘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반면 작업장과 해당 질환간 영향, 재해 예방에 대한 보건 안전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유독성, 취급 요령, 노출시 대응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노동자는 49.5%로 절반을 밑돌았다.

조사를 도맡은 노무법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점수를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매겼다. 설문 조사 36.17점, 심층 면담 38점을 합산해 평균을 낸 점수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 관련 사과·보상·근절 공식 의사 표명 ▲작업 환경 개선 대책 마련 ▲유해물질 취급과정 위험성 평가 및 해결책 수립 ▲사내 산업안전보건위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사측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 절차,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법 절차 상 큰 문제는 없었다. 일부 관리 차점에서 소홀했을 수는 있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사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노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내 산재 은폐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노동당국은 추가 실태 조사를 벌여, 산재 발생 보고 의무 누락과 관련해 시정을 명령했다.

과태료로는 2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윤희기자

## 유치장서 경찰관머리로 들이받은 불법체류 몽골인 구속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워 유치장에 입감했으나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까지 때린 불법 체류 외국인인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체류 도중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몽골인 A(3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15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 방지 시설물(벽면 보호막)을 잡아 뜯어내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인근 카페를 향해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에 출동한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체포 과정에 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6월께 비전문취업비자(체류기간 3년)로 입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억3000여만원 가로챈 수금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 거액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수금책이 구속됐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저금리 전화 대출 미끼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와 전북 전주·군산·익산 등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3000여만 원을 건넬바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넬바아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넬바아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을 활용, 가로챈 돈을 100만 원씩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ATM기기 앞에서 오랜 시간 무통장 입금을 반복한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발빠른 신고 덕분에 탈피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검거, 피해금 900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A씨가 입금한 계좌의 돈이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중간 전달책 계좌 추정)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 은행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피해금 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또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막았다.

## 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행 체포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광양시의 한 기업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검거했다.

이들은 광양시 중마동 소재 기업은행에 즉시 출동해 ATM기 앞에 있던 피해자를 수상히 여기고 검문했으며 끈질긴 추궁으로 피해자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한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남은 현금 1,500만 원을 가환반납도록 조치했다.

김중호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주력을 다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알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성착취 영상 미끼로 도박사이트 가입·돈 뜯은 일당 검거

### SNS 단체 대화방 통해 범죄, 5명 구속·2명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미끼로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인 일명 ‘픽

에 따라 배팅해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불법 행위로 신고되면 단체 대화방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으며,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하며 도박사이트 홍보를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대가로 받은 수익을 확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